

2024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4. 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4. 2. 15.(목) 14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1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p>○ 참석위원 정남철 위원, 이현수 위원, 노승용 위원, 전다운 위원, 지준연 위원</p> <p>○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성미 주무관(서기)</p>
안건	○ 2024-8 : 마을버스 재정지원비 업체별 상세내역
심의결과	○ 2024-8 : 부분인용

2-1. [의안번호 2024-8] : 마을버스 재정지원비 업체별 상세내역

○ 000 위원장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8호 버스정책과 소관 이의신청건을 상정합니다.

○ 000 위원

서울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대중의 발 역할을 하는 여객자동차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구인께서 공개를 구하고 계신 정보가 5년간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업체별로 얼마를 줬는지 그런 상세내역을 구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올해, 그러니까 2024년 지급할 예정금액은 얼마나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셨지요. 맞습니까?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그중에 세 번째 정보, 그러니까 올해의 예정금액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부존재 처리를 하셨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2024년 지급예정 스케줄이 안 나왔나요?

○ 000 주무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 매월이 끝나면 해당 월에 운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운행률을 집계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재정지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액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업체도 있고, 또 일정 실적을 충족을 시켜서 오히려 지원이 안 나간 업체도 있고 해서 실제 운행률이 나와봐야 재정지원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4년 1월 거를 제가 지금 작업을 갓 착수했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일정이 좀 많이 밀려서요. 그래서 제가 2024년 1월 걸 지금 막 착수한 까닭에 2024년 재정지원 예정금액이 2월, 3월 이후 것은 일단,

○ 000 위원

나가봐야 안다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은행를 산정은 끝났는데요. 제가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아직 은행를 산정만 끝났지 실제로 돈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추리기도 힘들고, 그 금액이 실제로 집행이 될지도 일단 제 결재선을 따라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아직.

○ 000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3번 공개 구하고 계신 자료는 아직 미완성 상태고,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2월, 3월 이후 거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1번, 2번 정보는 존재는 하는 것이잖아요.

○ 000 주무관

그런데 일단 마을버스 업체별 지급내역 같은 경우에 2022년, 2023년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대강의 금액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e호조에 히스토리가 있을 텐데, 업체별로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2022, 2023년 것 자료는 소장하게 있는데 2019, 2020, 2021 이렇게 3년치는 대

략만 있고, 뭐 총액 정도만 있는 그런 상태고, 업체별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000 주무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전임자분들께서는 그런 일련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도 있을 같았지만 제가 확인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시간 들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공하고 작업하시면 이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000 주무관

2022년하고 2023년 자료는 그래도 이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이전 자료는 제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대강의 금액 자체는 e호조 처리 이게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재무과 같은 데에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업체별로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오히려 안다고 하면 자치구 쪽에서 알지, 저희 시에서는 금액을 뭉텅이로 내보내는 거고 그 업체별 지급을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요. 오히려 조합이나 그쪽에 물어보는 게 더...

○ 000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구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의 구에 다 지금 골고루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 000 주무관

저희가 자치구에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운수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85%를 지급을 했을 때 만약에 나머지 15%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7.5%분을 자치구에서 지급을 했더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실제로 지급

을 했으면 저희도 나머지 7.5%를 지급해서 그렇게 100%가 나가고요. 그래서 자치구에 저희가 직접 주는 돈은 없습니다. 자치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100% 만들어서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네요.

○ 000 주무관

그건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서울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는 아마 서울시 조례가 가장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읽어보니 서울시에서 결국 이렇게 세금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도 받게끔 하고, 재정지원받은 사업자는 회계감사도 받고, 그것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정지원금 받은 것과 그다음에 돈 받았으니까 잘 경영했나라고 하는 거, 서울시가 마을버스 사업자분들, 회사들 서비스 경영평가도 하는 것 같고요. 경영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차등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결국 마을버스가 안전하게 잘 정비도 되고 그런 상태로 운행이 돼야 기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승객들도 안전하니까 그런 안전시설 이런 거는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골고루 다 서울시가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재정지원한 거, 그다음에 마을버스 경영평가한 거, 또 시설감독한 이런 거 전체를 다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서울특별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이 청구인이 원하시는 이런 마을버스업체별 얼마를 재정지원을 했고 이런 거는 서울시는 서울시의회는 소상히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 000 주무관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마을버스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고, 실제로 회계감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평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마을버스조합이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는지나 아니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3기관이나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시회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해서 마을버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업체별 지급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임자분 말씀에 따르자면 정보공개가 나간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는 공개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마을버스는 이렇게 업체별로까지 공개가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마을버스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시장치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의회라든가 아니면 회계감사라든가 서비스평가, 마을버스평가 이런 눈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어서 청구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버스회사에서 이거를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많이 차단되고 있어서 청구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

리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저는 짧은 생각으로나마 생각합니다.

○ 000 위원

그러시군요.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이게 정보공개법에 부합해서 이 문제의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는 또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어쨌거나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그 실태가 궁금해서 여쭙본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날짜는 안 나와 있던데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71 이 판결에서 버스 관련한 재정지원금 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청구인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판례를 제 나름 찾아보려고 했는데 구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결국 본문은.

그런데 혹시 주무관님은 좀 찾아보셨습니까?

○ 000 주무관

저도 이 판례가 정보공개 매뉴얼에도 있고, 저희 시에서 만든 매뉴얼에도 있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판례가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판례인지, 마을버스 보조금에 대한 판례인지에 따라서 약간 사안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전문을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청구인께서 주장하시는 판례가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판례라면 저희도 시내버스 보조금은 이미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판례에 따라서 저희는 그 판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을버스 보조금에 대한 판례라면 저희가 이 판례에 따라서 법에 귀속이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버스 보조금액에 대한 판례일 경우에는 저희 사안은 마을버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내버스랑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 운영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인 만큼 더 투명성이라든가 국민에 의한 통제 이런 게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게 맞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도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민영제라고 보면 약간 상대적으로 더 업체들이 재산권 보호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든 아무래도 마을버스가 더 수익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정 적자는 커가고 있고요.

저희도 지원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노선들은 심지어 폐선이 되고, 운행률도 떨어지고, 운행 대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마을버스라는 제도 자체를 보호하고, 마을버스가 다니는 골목골목길에 있는 시민들이 이동권을 보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업체들 재산권을 보호해서 어느 업체가 보조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 줘서 노선이 더 잘 팔리거나 아니면 이 노선이 어느 정도는 이걸 보호를 해 줘야 그래도 시장 이탈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결국은 시내버스에 대한 판례인지 마을버스에 대한 판례인지 제가 정말 배움이 짧은 까닭에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점을 좀 명확히 한 다음에 이 판례를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짧은 생각으로나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000 위원

주무관님,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서울시에서도 공개를 한 바가 있다고 전임자께서 얘기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리고 그 근거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반면에 마을버스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프라이빗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저 시내버스와 동일선상에서 둘 일은 아니다 이런 지금 논리를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준공영제하고 민영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지요?

○ 000 주무관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영제로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면 노선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리고 일부 수익이 나는 노선에 업체들이 집중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폐선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큰 손실이 나더라도 업체를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준공영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영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시장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책임은 업체들한테 귀속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준공영제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수익보전이라든가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

수익보전은 지금 마을버스도 이 보조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서울시로부터 세금을 받는다는 점은 마을버스건 시내버스건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공영제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노선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일단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면, 완전 시장 자유에 맡기면 적자나면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적자나도 계속해라 이렇게 좀 의무 부과적인 영업의 자유가 아니라 영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의미에서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마을버스는 적자나면 그냥 조금 더 쉽게 시장에서 이탈 영업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턱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

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마을버스건 시내버스건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을버스에 관한 조례와 시내버스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가 각각 마련되어 있는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규정들이 그렇게 썩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회계감사하고 경영평가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거는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그렇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결국은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이 국민 세금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세금이 사용되었는지 국민이 알권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도 시내버스에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를 해오셨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마을버스는 조금 더 시내버스에 비해서 여러 재정지원금 받은 것도 일종의 경영상 정보니까 이걸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걸 공개했을 때 우려되는 가장 큰 어떤 문제의 버스, 마을버스회사들에게 미쳐질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 000 주무관

일단 상대적으로 어떤 노선이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선인지가 명확해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쟁업체라든가 이런 데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업체들끼리 그런 인수합병 메커니즘 이런 게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여기도 근로자분들 월급도 못 주실 정도로 약간 재정난에 허덕이

시는 그런 업주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자들이 노선을 처분하려고 하실 때 이게 수익이 잘 나지 않는 노선이라는 게 좀 명확해지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도가 좀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노선이 폐지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운행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업체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이게 진입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는 조금 더 업체들이 자유로운데 그 과정에서 결국 문제의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얼마짜리다, 돈이 되는 노선이다 안 되는 노선이다라고 하는 그게 알려지면 오히려 장사 안 되는 노선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돼서 하려는 마을버스회사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23년 작년 건데요. 작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엑셀파일을 보내주셨잖아요. 업체별로 이러이러한 돈을 지급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액수를 적어주셨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해당 자치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별 업체들별, 또 월별 액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운수업체별 액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달별로 서울시에서 얼마에, 그러니까 운수업체 지금 모두 몇 개지요?

30... 훨씬 더 많네요. 145개...

○ 000 주무관

142개입니다.

○ 000 위원

그런가요? 중간에 운행 안 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총액하고 평균액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업체별로 얼마가 지급되어 있는지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니까 평균과 합계를 공개하는 것은 별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 000 주무관

그럴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제가 합계는 이해가 되는데 평균은 무슨 뜻인가요? 맨 상단의 칼럼에 있는.

○ 000 주무관

평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게 재정지원 총액을 재정지원 대상 업체로 나눈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렇겠네요. 대략 제가 보니까 2023년 1월의 총합계가 49억인데, 업체 한 100여 개 되는 걸로 나누면 업체별로는 한 4,100만 원 정도 1월에 지급됐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질문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면 일단 저희가 좀 의논을 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님, 잠깐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 000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 000 위원장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청구인께서 1번, 2번, 3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정보를 공개청구하셨는데요.

주무관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2004년 재정지원 예정금액 업체별 상세라고 되어 있는 이 3번 정보는 부존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정보는 부존재여서 이게 각하인지 기각인지 항상 헷갈리는데요. 부존재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1번, 2번 정보가 5년간 마을버스 업체별 지급내역, 그다음에 2번은 지급 상세내역 이렇게 청구인께서 구하셨는데요. 2번이 지급 상세내역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상세를 구하는 것인지가 사실은 그 청구 취지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통틀어서 이거 5년간 마을버스업체별 지급내역을 구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그래서 일단 2022, 2023년 자료는 확실히 있다고 하시는데 2019, 2020, 2021년 거는 잘 모르시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쓰면서 어떤 기록을 남겨놓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담당해 주시는 주무관님이 업무 지금 담당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이렇게 인수인계 더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상식적인 추측을 해 보고요.

그래서 부존재로 봐야 될 그런 정보는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청구인께서는 업체별 지급내역을 공개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주무관님께서 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조금 달리 봐야 되고, 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에 비해서 훨씬 더 시장의 진출입이 허들이 낮다 보니까 이

러한 정보, 업체별로 얼마가 지급됐다고 하는 게 결국은 계산식도 사실은 조례에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역추적을 하면 이게 적자 노선인지 흑자 노선인지 이런 것도 대략은 알게 되고, 그래서 각각 이 운수회사들의 시장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도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러한 판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마을버스인지 시내버스인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저도 이 판례를 조금 더 원문을 구해 볼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제 선에서는 급히 찾을 수는 없어서 저도 판결문 원문까지 다 보지는 못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이게 마을버스업체별 지급내역을 보고 싶다, 결국은 지금 청구인이 마을버스 운전기사, 운수종사자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너무 낡고,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소속된 회사의 사장님이 보조금을 받고 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대로 쓰시는지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해서 정보공개를 아마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 조례를 꼼꼼히 읽어봐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투명성 확보수단은 조례에서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실정법상으로는 이걸 관보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지 이런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정보공개법으로 돌아와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안에서 업체별로 공개해 달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전부 기각을 할지, 아니면 저는 여기 정보공개법 7호 소정(所定)에 사유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이 되어서요. 그렇게 그냥 전부 기각을 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내주신 이 해당 정보 중에 말씀드렸던 총액 합계액하고 업체별 평균액은 있으니 그 정도 부분공개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은 같은데요. 아마 청구인이 요구하시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속 시원한 정보공개는 분명히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부분공개라도 하면 어떨까 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 000 위원장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저도 평균 합계액을 공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모든 운수회사를 공개하는 거는 여기 총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원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 신청인은 알고 싶은 게 사실 그 해당 운수업체에 관한 정보거든요.

○ 000 위원

그렇지요.

○ 000 위원장

여기는 사실 공개를 하더라도 크게 이거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공개를 할 때 평균 합계 플러스 이 신청인이 소속된 운수회사까지 포함해서 부분공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여쭙본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공개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약간 그 범위를 좀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 000 위원

저도 부분공개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를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일단 3번 부존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래서 그 부분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 2번은 일단 부서에서 자료를 안 주신 것에 대한 유감을 포함합니다. 이게 분명히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 자료를 다 안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에 좀 보완됐으면 좋겠고, 주무관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다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서울시 이전의 선례도 있고, 판례도 있고요. 검색하다 보니까 서울시 정보공개 매뉴얼에서도 운수업체지원 보조금액 운수회사별, 일자별, 항목별로 공개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은 마을버스여서 다른 것이냐가 쟁점일 텐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든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의 진출입이 얼마나 수월한지보다는 사실 그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여기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버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지가 보이지 않아서 똑같이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선례나 이런 거에 비춰서 1, 2번 자료는 공개하는 이의신청 인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인용 의견 주셨고요.

아까 그 판례가 사실 이게 수원지법 판례인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서울행정법원 판례로 나오기도 합니다.

검색해 보니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뭐 공고를 안 한다고 비난은 많습시다마는, 여전히 저희가 접근하는 게 제한이 좀 있어서요.

어쨌든 그 사건과 하급심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판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 000 위원

저도 부분공개 의견이고요.

그리고 평균치하고 총액을 공개해도 청구인이 원하는 거는 당연히 그 해당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혹시 해당 운수업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아마 이것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이 될 수는 있지만 크게 공익에 저해되는 게 아니고, 해당 신청인 자체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는 공개를 하는 게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000 위원

지금 그런데 정보공개신청서나 이의신청서나 다 읽어봐도 청구인께서 운수회사의 운행사원이라고만 얘기하고 계시지 어떤 마을버스 회사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안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러면 청구인한테 어느 회사인지 물어보고 회사별 정보를 그것만 딱 띄워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 저는 조금...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 000 위원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여기 담당 주무관님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000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청구인한테 소속 회사가 어디냐 하는 개인정보를 오히려 서울시에서 캐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청구인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이런 걸 혹시라도 우려하셔서요. 서울시한테 정보공개해달라고 했더니 왜 정보공개를 핑계로 내 정보를 캐느냐. 그런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그 회사를 특정하는 게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000 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주무관님 의견을 좀 여쭙고 그게 지금 파악이 됐는지, 특정되는지를 일단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만 공개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부분인용 의견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부분인용으로

하고요.

이 신청인의 소속 회사가 파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의견을 좀 모으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2019, 2020, 2021년 5년치 정보를 요구하시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 2020, 2021년 자료도 부분공개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저희가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000 주무관

네.

○ 000 위원장

먼저 지금 신청인 소속 운수회사는 알고 계시나요?

○ 000 주무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신청인이 그런 거는 요청하거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까?

○ 000 주무관

네, 일절 밝힌 바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렇다면 운수회사에 대한 공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22, 2023년 자료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2019, 2020, 2021년 자료는 지금 업무가 아직 좀 원활하지 않아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지요? 자료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요?

○ 000 주무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하다못해 대학에서도 지금 답안지 같은 것도 지금 몇 년씩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문서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걸 임의로 파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2022, 2023년 자료는 물론이고 2019년부터 2021년 자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요.

저희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입니다.

본 안건을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이 부분인용건과 관련해서 신청인의 운수회사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모든 운수회사의 세부내역은 총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평균하고 합계, 월별 이 자료는 공개해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 2023년, 그리고 그 앞에 2019년부터 2021년 5년치니까 세 개 연도도 열심히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은 저희가 지금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존재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한 1번, 2번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3번은 기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000 주무관

알겠습니다.

○ 000 위원장

엑셀파일의 평균합계의 월별, 연도별 내역을 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8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